‘층간소음·흡연’ 아파트 주민 간 갈등 고조

광주 관련 민원 올 195건…실내흡연 법적 처벌 규정 없어
분쟁해결지원센터 “서로 이해·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필요”

#여수의 한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벌이던 윗집·아랫집 주민 간 말다툼 끝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래층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윗집 40대 부부 2명이 숨지고, 60대 부모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광주 동구 빌라에서 한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녀들이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구속됐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에 이어 층간흡연이 주민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담배연기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파트 흡연문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층간소음·흡연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14·30건, 2019년 174·20건, 2020년 213·49건, 2021년 8월 말까지 167·28건으로 파악됐다.

일부 흡연자들이 본인 편의를 위해 건물 밖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집 안 화장실과 베란다 등에서 몰래 흡연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웃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은 띄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민 박모(38)씨는 “어디서 올라오는지도 모르는 담배 냄새 때문에 짜증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참다못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몇 차례 흡연 민원을 넣어봤지만, 방송만 나오고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31)씨도 “아파트 계단에서 한 주민이 담배를 피우길래 여기서 피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오히려 화를 냈다”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입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내 흡연 자체를 당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일이 흡연자를 찾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흡연을 제재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흡연 자제방송을 하거나 엘리베이터·계단 등에 스티커 문구를 부착해 흡연구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동 공간이 아닌 집 안에서 피우는 담배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주민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상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 간의 쌓인 감정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훈 기자

지역연계 자원봉사캠프 개소 6일 오후 광주 서구 농성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연계 자원봉사 거점 확대를 위한 농성2동 자원봉사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서대석 서구청장과 김용주 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고윤순 캠프장,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윤창호법’ 효과 없나…음주 교통사고 증가

지난해 광주 전년比 62건·전남 82건↑…단속 강화 절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은 각각 602건·883건에 달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최근 4년간 광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17년 679건, 2018년 671건, 2019년 540건, 2020년 602건으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62건 늘어났다.

전남지역 역시 같은 기간 921건, 913건, 801건, 883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7천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천708건)에 비해 10%(1천539건)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해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학동 붕괴 참사’ 재개발조합 전 임원 구속영장

알선 대가 업체 3곳 수억원 받아…관련 브로커 1명 신병처리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 선정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출신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붕괴 참사 현장 재개발사업 관련 공사 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로 브로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브로커 1명에 대해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업체 선정 알선을 대가로 공사 업체 총 3곳으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브로커 A씨는 해당 재개발조합의 전직 이사로, 조합 임원이 공무원 신분에 해당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적용됐다.

A씨 등은 같은 브로커 행위로 구속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이모씨 등과 함께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하거나, 개별적으로 업체 선정에 관여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명의 브로커가 추가로 신병처리 되면 붕괴 참사 관련 업체 선정 브로커 적발자는 총 4명으로 늘게 된다.

A씨 등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실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밝혀져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병 처리도 예상된다.

경찰은 붕괴 참사 직접 원인 제공자와 별도로 업체 선정·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를 진행, 현재까지 18명을 입건(2명 구속)한 상태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관이 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각종 의혹도 제기돼 붕괴 참사 수사에 차질이 우려됐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 수사관 소속 팀을 이번 수사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의혹을 불식하는 노력을 펼치는 한편 “학동 붕괴사고 수사본부에서는 붕괴사고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수 기자

법원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정신감정 채택

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6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정신질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1m 길이의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그는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되자 바로 옆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A씨는 범행 전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며 수사 기관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동수 기자

‘층간소음’ 살인 30대 기소 의견 송치

여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6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3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33분께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숨진 부인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A씨는 피해자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집에 와있던 60대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김동수 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TIME CITY)
| 책임 A/S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우편집중국
롯데마트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겨자씨 교회
보훈 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 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앗차하십니다

급매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가든형갈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